

© BRIEF

E.S.G.

지속가능한 형태의 E.S.G. 경영을 위한 주주총회 내실화 - 회의체로서의 주주총회를 중심으로 -



권 용 수

건국대학교 글로벌캠퍼스 교양대학 조교수

* 이 글은 2023년 3월 16일 제4차 E.S.G. 법제 포럼에서 논의를 거쳐 저자가 정리한 의견으로서, G - Brief에 수록된 글의 저작권은 한국법제연구원에 있습니다.

** 따라서 이 글을 인용할 경우, 권용수, “지속가능한 형태의 E.S.G. 경영을 위한 주주총회 내실화 - 회의체로서의 주주총회를 중심으로 -”, G - Brief No.9., 한국법제연구원(2023), ○○면을 표기하여야 합니다.

I. 들어가며

종래 기업에서는 주주의 이익에 초점을 맞춰 주주를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의 이해를 조정하고, 그 본질적 요소인 영리성을 실현해 왔다. 그 배경에는 주주가 잔여재산청구권자라는 점에서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면 다른 이해관계자의 이익도 보장될 수 있다는 이해가 있었다. 그런데 기업이 환경·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증대하고, 기업의 행동이 정부의 한계를 보완하는 수준을 넘어 더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기대가 생기면서 '주주의 이익'에 맞춰졌던 초점을 이동시키려는 논의가 본격화하였다. 그 결과 종래 다수를 차지하였던 ① 주주우선주의(Shareholder Primacy Approach) 외에 ② 계몽적 주주가치(Enlightened Shareholder Value, Inclusive Approach), ③ 다원적 접근(Pluralist Approach)에 기초한 견해들이 시선을 끌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①에서 ③으로 논의가 확장되는 과정에서, 기업이 주주의 이익과 더불어 환경·사회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형태의 E.S.G. 경영¹⁾을 추구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깊어졌다.

현재는 기업의 E.S.G. 경영이 선택이 아닌 필수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으며, 지속가능성이라는 관점에서 E.S.G. 경영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가가 주요 과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문제는 기업의 본질적 요소인 영리성과의 관계에서 E.S.G. 경영의 의의가 인정되고 경영진이 기업을 위하여 특정 요소를 고려한 E.S.G. 경영에 임할 필요가 있다고 해도, 기후변화에 따른 국제적 경쟁 조건 변화(탄소중립 등)처럼 비용 대비 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E.S.G. 경영의 축진을 기대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비용 대비 효과가 불분명하고 주주의 지지를 얻지 못한 E.S.G. 경영 추진 시에는 이사의 의무와 책임 문제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상기 문제를 법의

1) 자본비용을 웃도는 이익을 기대할 수 없는 경영은 주주의 지지를 얻을 수 없으므로 지속가능할 수 없다는 견해가 있다(田中亘, “コーポレート・ガバナンスの観点から見た日本版スチュワードシップ・コード: 英国コードとの差違に着目して”, 『信託フォーラム』1(日本加除出版, 2014), 38頁). 이를 달리 보면 주주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것이라면 지속가능할 수도 있다는 것이 된다. 이러한 이해를 토대로 이 글에서는 지속가능한 형태의 E.S.G. 경영을 '주주의 이익과 더불어 환경·사회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것'으로 상정하였다. 여기서 '주주의 이익'은 반드시 경제적 이익만을 상정한 것은 아니고, 주주의 투자 목적이나 의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상정하였다.

영역에서 정면으로 다루는 것은 어떨까? 그것은 기업마다 역량과 사정이 다르고 성공 조건이 다를 것을 생각할 때, 지속가능한 형태의 E.S.G. 경영을 촉진한다는 차원에서 그리 바람직한 방안이 아니라 생각된다. 기업의 지배구조를 제대로 작동시키고 그로부터 지속가능한 형태의 E.S.G. 경영 촉진을 유도하겠다는 관점에서 보면, 규제를 통해서 E.S.G. 경영을 유도하기보다 기업을 지탱하는 기반 개선을 통해서 개별 기업에 적합한 형태의 E.S.G. 경영 촉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기업을 지탱하는 기반으로는 주주(기관투자자), 경영진 양성·선택·감독 시스템, 법원 등을 생각할 수 있다.²⁾ 이것들은 기본적으로 E.S.G. 중 G에 관계된 것이자 지속가능한 형태의 E.S.G. 경영 촉진과 밀접한 관계를 지닐 수 있는 것인데, 그중에서도 주주(특히 국내 주주)는 우리 기업의 사정에 부합하는 지배구조 구축을 비롯해 지속가능한 형태의 E.S.G. 경영 촉진이라는 측면에서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된다.

II. E.S.G. 경영과 주주, 그리고 주주총회

1. E.S.G. 경영과 주주

기업을 규율하는 상법은 주주에게 기업경영에 대한 궁극적인 지배권을 인정하고 있다. 단적으로 주주로 구성되는 주주총회는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서 정관변경 등 기업의 기본구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뿐 아니라, 이사·감사 등을 선임·해임하고 그들의 책임을 면제하는 등 기업에 관계된 본질적 사항에 관한 결정권을 가진다.³⁾ 다수 주주의 권한이 제약되는 현실을 생각할 때 주주총회의 권한 = 주주의 권한이라고 할 수 없

2) 江頭憲治郎, “会社法改正によって日本の会社は変わらない”, 「法律時報」第86巻第11号(日本評論社, 2014), 60頁.

3) 주주총회는 기업의 기본구조에 관한 사항(영업양도, 정관변경, 자본금감소, 합병, 분할, 주식교환, 주식이전, 해산, 계속, 조직변경 등), 기관 구성에 관한 사항(이사, 감사, 청산인 등의 선임·해임), 주주에게 재산적 이해 관계가 있는 사항(재무제표 승인 및 이익배당 결정, 이사·감사·청산인의 책임면제 등) 등에 관한 결정권을 가진다.

는 면도 있지만, 이것이 주주의 권한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이상은 상법이 ‘주주’를 기업 제도의 가장 핵심적 요소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로부터 기업이 라면 그 시작부터 끝까지 주주(주주의 이익 포함)를 염두에 두고 조직·운영될 필요가 있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다.

위의 관점에서 보면 주주가 기업에 출자한 이유부터가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며, 지속 가능한 형태의 E.S.G. 경영은 이에 대한 이해로부터 출발한다고 생각된다. 이것은 가장 기초적인 G의 출발점인 동시에 주주의 지지를 바탕으로 G와 E와 S의 충돌 상황을 해소하는 열쇠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⁴⁾ 그렇다면 주주가 기업에 출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나라의 주주는 다른 주요국에 견주어 영리 실현(특히 단기적 관점의 영리 실현)⁵⁾을 이유로 기업에 출자하는 경향이 강하지만, 주주마다 기업에 출자하는 이유는 다를 것이고 그 구체적 내용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이 점에서 기업은 되도록 많은 주주와의 건설적인 대화에 힘쓸 필요가 있고, 그것을 토대로 자신의 상황과 사회적 요청에 부합하는 지속가능한 형태의 E.S.G. 경영 실현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⁶⁾

2. 회의체로서의 주주총회 내실화

지속가능한 형태의 E.S.G. 경영을 목표한 기업과 주주 간의 건설적인 대화는 수시로 이루어지는 게 좋을 수도 있겠으나, 그것은 현실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이상적이지 않

4) 기업을 지탱하는 가장 핵심적인 기반인 주주는 기업에 출자한 이유가 상실되면 언제든지 그 기업을 떠날 수 있다. 이 점에서 주주의 출자 이유에 반하는 E.S.G. 경영은 지속가능하기 어렵다.

5) 우리나라는 2020년 기준 주식 회전율이 세계 3위를 기록할 만큼 단기투자성향이 강한데, 수익률의 변동성과 왜도(skewness)가 크고 가격대가 낮은 주식, 즉 복권과 유사한 특성을 갖는 주식을 선호하는 사람일수록 주식을 빈번하게 거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민기·김준석, 「국내 개인투자자의 형태적 편의와 거래형태」, 자본시장연구원, 2022, 54면). 실제 우리나라의 개인투자자는 복권과 유사한 특성을 갖는 주식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암호화폐 열풍이나 레버리지 상품을 이용한 투자 급증 등을 생각하면 매우 높은 수익률과 자금을 추구하는 개인투자자의 존재를 부정하기 어렵다.

6) 참고로 E.S.G. 경영 실현 방안으로는 크게 ① E.S.G.를 사업 대상으로 삼은 방안과 ② E.S.G.를 기업활동에서 고려해야 할 대상으로 삼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는데, 장기적 관점의 이익 극대화가 선호될수록 E.S.G. 경영 실현 방안에 관한 선택지는 넓어질 것이다(권용수, “코스닥기업과 ESG 경영의 관계 및 향후 과제 : ESG 중 ‘S’를 중심으로”, 『경영법률』 제33집 제2호, 한국경영법률학회, 2023, 43~44면).

다. 실제 기업과 주주 간의 대화는 주주총회를 제외하면 그리 많지 않다. 사실 주주총회에서 다루어지는 것, 주주의 질의가 인정되고 출석 이사에게 설명의무가 부과되는 것, 주주에게 주주제안권이 인정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주주총회만 잘 운영해도 기업과 주주 간의 건설적인 대화를 상당 정도 담보할 수 있다.⁷⁾ 이 점에서 주주총회(주주총회 당일 포함)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으며, 주주총회의 의의(특히 ‘회의체로서의 주주총회’⁸⁾)도 재조명되고 있다.

주주총회의 ‘회의체’ 기능을 강화하고, 그로부터 효율적인 지배구조 구축을 비롯해 지속가능한 형태의 E.S.G. 경영의 방향성을 도출하려면 주주총회 운영 전반에 관한 고민이 요구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단순히 주주총회에 많은 주주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되고, 기업의 사정을 이해시키고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대화가 가능해지도록 하는 것, 주주총회 출석을 비롯해 주주의 권리 행사가 저해되지 않도록 하면서 주주권이 남용되어 의사진행이 현저히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 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주주총회는 신인의 장이자 확인의 장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주주총회에 되도록 많은 주주가 참여하도록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다만 기업의 사정이나 의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주주의 참여는 자칫 기업과 주주 간의 대화를 왜곡시키고 주주총회의 합리적·효율적 의사결정을 저해할 가능성(= 주주의 이익, 나아가 기업의 이익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

III. 회의체로서의 주주총회 내실화에 관계된 쟁점

각 기업의 역량과 사정에 부합하는 지속가능한 형태의 E.S.G. 경영 방향 모색을 위한 회의체로서의 주주총회 내실화, 즉 기업과 주주 간의 건설적인 대화 실현에 관계된 주

7) 주주로서는 주주총회만큼 존중받으면서 기업과 효율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장소 없다.

8) 회의체로서의 주주총회와 관련해서는 특히 신인의 장이자 확인의 장이라는 점, 대화의 장이자 정보제공의 장이라는 점이 주목받고 있다. 회의체로서의 주주총회에 대해서는 권용수, 「전자주주총회 해외사례 및 입법 동향 연구」, 상장회사협의회, 2021, 14면.

요 쟁점은 무엇일까? 이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래에서는 추후 활용 가능성도 고려해 2021년 12월에 공개된 K-ESG 가이드라인의 기본 진단항목을 소재로 상기 쟁점을 도출하고 검토 과제를 고민해 보려 한다.

1. 주주총회 개최 시기 및 장소

주주총회 개최일이나 장소 등을 적절히 결정하는 것은 주주들이 기업과 건설적인 대화를 나눌 기회를 확보⁹⁾하고 기업경영에 주주의 진정한 의사를 반영¹⁰⁾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 점에서 K-ESG 가이드라인이 주주총회 개최일을 기본 진단항목으로 다루고, 개최일 지정 시 아래의 요소를 고려하도록 한 것은 평가할 가치가 있다. 결산일 = 기준일이라는 관행을 탈피하는 것이 그리 쉽지만은 않은 측면이 있는 데다가¹¹⁾ 주주총회 개최까지의 과정을 생각하면, 일단은 주주총회가 기업의 사정이나 주주 등의 의견을 토대로 합리적 범위 내에서 분산 개최되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다만 주주의 의안 검토 기간을 충분히 보장함으로써 주주와 기업 간의 건설적인 대화를 실현하겠다는 관점에서 보면, 장기적으로 기존 관행을 탈피하고 3월 중 주주총회 분산 개최를 넘어 4월 주주총회 개최를 유도하는 인센티브적 요소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9) 결산일로부터 주주총회 개최일까지의 기간(주주총회 개최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주주와 기업의 건설적인 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주주총회 개최 기간이 짧아질수록 소집통지 발송 시부터 주주총회 개최일까지의 기간도 짧아질 수밖에 없는데, 후자의 기간이 짧아지면 주주의 의안 검토 기간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주주가 의안 검토 기간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면 주주총회 의안에 대한 주주와 기업 간의 건설적인 대화는 기대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10) 예컨대, 정기주주총회 개최일을 3월 이후로 하는 것은 결산일 = 기준일의 공식을 깨고, 기준일과 주주총회 개최일 간의 기간 단축 가능성을 높여 Empty Voting 문제를 완화하는 데 이바지할 수도 있다.

11) 결산일 = 기준일이라는 관행 탈피는 단순히 정관변경 문제로 접근할 수도 있다. 그러나 결산일 = 기준일이 사회적 통념인 우리 현실을 생각하면, 해당 관행 탈피는 주주 등의 혼란 초래 가능성 등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 재무 결산 및 감사보고서 발행일 고려
- 조직의 연간 업무계획 및 경영진 등의 업무 일정 고려
- 연기금, 기관투자자, 의결권자문사 등 주요 시장 참여자 의견 수렴
- 소액주주 및 기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 수렴
- 주주총회 예상 집중일 고려

한편, 최근에는 주주총회를 언제 개최할 것인지에 더해 어디서 개최할 것인지가 회의 체로서의 주주총회 내실화 관점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이는 주주와 기업의 건설적인 대화 실현을 위해서는 시간적 제약뿐 아니라 물리적 제약을 해소해 주주의 주주총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기본임을 생각할 때 당연한 흐름이다. 관련해서 특히 주목받고 있는 부분은 물리적 공간을 넘어 가상의 공간에서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것을 상정한 전자주주총회 개최이다. 전자주주총회는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시간적·물리적 제약을 획기적으로 해소함으로써 주주의 주주총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것에 더해, 기업과 주주를 비롯한 이해관계자의 정보 공유와 의사소통 촉진, 일부 주주 중심의 주주총회 운영 탈피를 통한 주주 민주주의 실현 등에 이바지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 법무부가 전자주주총회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그 윤곽이 곧 공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 내용을 토대로 기업의 전자주주총회 개최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고민이 요구된다.

2. 소집통지 등

주주총회 소집통지·공고 시기 및 방법을 적절히 설정하는 것은 주주의 의안 검토 기간을 보장하고, 주주와 기업 간의 대화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할 수 있다. 이 점에서 K-ESG 가이드라인이 소집통지·공고를 기본 진단항목의 하나로 다룬 것은 의미가 있다. 다만 K-ESG 가이드라인의 경우 소집통지·공고 방법의 다양화¹²⁾에 대해서는 다음

12) 소집통지·공고 방법의 다양화는 소집통지 발송 시 그 도달까지 시간이 걸리고, 그로 인해 의안 검토 기간이 확보되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다. 참고로 주주총회 개최 기간이 우리나라와 비슷한

과 같은 점검 기준을 제시한 데 반해, 그 시기에 관해서는 특별한 점검 기준을 두고 있지 않는데¹³⁾ 주주총회 실무 동향을 토대로 추가적 검토를 진행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

- 주주총회 소집 통지서 외 ① 조직의 사업장 게시판, ② 조직의 온라인 홈페이지, ③ 명의 개서대행사, ④ 일간지(신문), ⑤ 전자공시시스템, ⑥ 기타 방식 중 몇 개의 추가 방식을 이용하는지

기본적으로 결산일부터 주주총회 개최일까지의 기간이 짧은 우리나라에서는 주주총회일 2주 전보다 앞선 시점에 소집통지·공고를 요구하고, 그것을 평가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은 면이 있다. 단적으로 결산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작성, 해당 재무제표 등을 승인하는 결산이사회 개최, 승인된 재무제표 등의 감사 의뢰, 주주총회 소집 결의 등 주주총회 관련 절차를 생각하면 언제 주주총회를 개최하느냐에 따라 주주총회 2주 전 소집통지·공고도 벅찰 수 있다. 한편 기업이 주주총회 개최 시기를 늦추는 것은 임원 인사 시기나 기업의 연간 일정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참고로 OECD Corporate Governance Factbook을 봐도 주주총회일 3주 이상 전에 소집통지 등이 이루어지는 국가는 많지 않다(아래 <각 국가의 소집통지 기한> 참고). 그러나 결산일 = 기준일이라는 사회적 통념이 깨지고 주주총회 개최 시기가 다양해진다면 소집통지·공고 기한 연장의 편익과 기업의 애로를 검토한 가운데, 소집통지·공고 시기와 방법에 관한 점검 기준을 복합적으로 활용해 기업의 'G'에 관계된 노력

일본의 분석을 보면, 주주총회 개최일 2주 전에 소집통지를 발송할 시 기관투자자의 실질적 의안 검토 기간이 3~4영업일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서면투표 이용 기준). 위 기간 산정 근거는 다음과 같다. ① 주주총회 개최일 2주 전에 소집통지를 발송할 시 발송일부터 주주총회 개최일까지의 기간은 11영업일, ② 국내 기관투자자에게 소집통지가 도달하기까지 2~3영업일이 필요, ③ 관리신탁은행의 지도 집계 및 주주명부관리인에 대한 우송에 약 2영업일이 필요, ④ 주주명부관리인의 행사 결과 집계 등에 약 3영업일 필요, ⑤ 따라서 의안 검토 기간은 「11영업일 - 7~8영업일 = 실질 3~4영업일」이 된다(經濟産業省, 「基準日変更に関する考え方」, 第4回 株主総会プロセスの電子化促進等に関する研究会 事務局提出資料(平成28年3月4日), 2頁; 經濟産業省, 「対話先進国の実現に向けて」, 株主総会プロセスの電子化促進等に関する研究会報告書, 2016, 40~41頁).

- 13) 추가 설명에서는 주주가 주주총회 안전에 대해 충분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기간을 고려해 소집통지·공고를 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을 좀 더 합리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각 국가의 소집통지 기한>¹⁴⁾

	> 28 DAYS	22-28 DAYS	15-21 DAYS	10-14 DAYS
Required to send to all shareholders (34)	Canada* Czech Republic Hungary Italy Netherlands United States*	Australia Indonesia Peru	Chile China Colombia Denmark Estonia Finland France India Ireland Israel	Lithuania Luxembourg Malaysia Norway Poland Portugal Russia Saudi Arabia South Africa United Kingdom
Not required to send to all shareholders (16)	Argentina Belgium Germany Latvia Slovak Republic Slovenia Spain	Austria Sweden	Brazil Costa Rica Greece Hong Kong (China) Mexico Portugal Turkey	

3. 주주제안

주주는 주주총회 의사결정에 최대 이해관계를 가진 자이다. 이 점에서 주주에게 의안 제안 기회를 인정하는 것은 'G'(거버넌스 왜곡 억지 등)를 넘어 기업의 지속가능성이 라는 관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 때문에 법에서는 주주제안 제도를 두고 있다 ('상법」 제363조의2). 다만 특정 주주가 주주제안권을 남용하는 것은 주주총회 운영을 저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주주 일반, 나아가 기업의 이익을 해할 우려도 있다. 그래서 상법은 주주제안권을 소수주주권으로 하였다.

이상을 생각하면 기업은 주주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제안 등이 거부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기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다른 이해가 있는 주주의 남용적 주주제안을

14) OECD(2021), *OECD Corporate Governance Factbook 2021*, p.72.

통제하는 체제를 정비함으로써 ‘G’의 왜곡을 억지하고 지속가능한 형태의 기업경영(E.S.G. 경영 포함) 방향을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다. 관련해서 기업이 임시주주총회 개최일 등을 적절히 결정하고 있는지,¹⁵⁾ 주주제안의 대상 범위를 적절히 보장하고 있는지¹⁶⁾ 등을 평가하는 것도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된다. 덧붙여 기업에 특정 행위를 강제하는 것은 곤란한 면이 있지만, E.S.G. 경영처럼 기업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할 필요가 있는 영역과 관련해 주주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하는 수단으로서 권고적 주주제안을 검토하는 것 역시 평가의 가치가 있어 보인다.

4. 의결권 행사

주주는 자기 행동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 불분명한 경우, 다른 자의 행동에 따른 이익에 편승하려는 경향이 있다(합리적 무관심). 이는 기업과 주주 간의 건설적인 대화를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이 점에서 우리는 건설적인 대화가 아니더라도 기업경영에 주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그 추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관련해서 특히 주목받는 것은 주주의 의결권 행사이다. 의결권 행사는 대화보다 비용 등의 부담은 적으면서 주주가 기업에 자기 의사를 반영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기 때문이다.

<주주 관여 활동과 비용 등 부담의 관계>¹⁷⁾

← 비용 감소				비용 증가 →		
← 낮은 지분율				높은 지분율 →		
의결권	서신	사적 대화	주주제안	소송	캠페인	위임장 경쟁

15) 최근 일부 기업이 이사회에서 임시주주총회 소집결의를 하면서 그 개최일을 6주 이내 기간(「상법」 제362조의2 제1항에서는 주주총회일 6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주주제안을 할 수 있다고 규정)으로 결정해 주주제안을 곤란케 한 예가 있었다.

16) 「상법」 제362조의2 제3항에 따르면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해서는 안 된다.

17) 송홍선, 「스튜어드십 코드와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 자본시장연구원, 2018, 40면.

K-ESG 가이드라인에서는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편의를 제공하는 장치로서 서면투표나 전자투표 등의 도입을 언급하고, 그 도입 여부를 점검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K-ESG 가이드라인이 의결권 행사를 다룬 것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기업과 주주 간의 대화 심화라는 관점에서 보면 좀 더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검토의 필요성이 느껴진다. 예컨대, 2020년 1월 상법 시행령 개정에서는 전자투표를 위한 주주 확인 방법을 추가하고(「상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기업이 전자투표 종료일 3일 전까지 주주에게 전자문서로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을 한 번 더 통지할 수 있는 규정(동조 제6항)을 신설하였는데, 이를 반영하는 것에 관한 검토의 여지도 있어 보인다.

한편, K-ESG 가이드라인에서는 소액주주의 의사 반영을 강화하는 수단으로서 집중투표 제도의 도입도 기본 진단항목의 일부로 다루고 있다. 최근 소액주주들이 ‘독단적 지배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의결권 행사에 임하고 있음¹⁸⁾을 생각하면, 집중투표 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수 있다. 다만 집중투표는 찬반의 대립이 심하고 그 악용 문제도 상당한 만큼 서면투표나 전자투표와 동일선상에서 취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면이 있다. 참고로 K-ESG 가이드라인에서는 집중투표 도입과 서면투표·전자투표 도입의 평가 비율을 아래와 같이 달리하고 있는데, 집중투표 도입을 추가적 평가 요소(인센티브적 요소)로 자리매김시키는 것도 고민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된다.

- 집중투표제 도입(1/5)
- 서면투표제 도입(2/5)
- 전자투표제 도입(2/5)

18) 크라토스의 2023년 3월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액주주들의 의결권 행사 주요 목적은 ‘독단적 지배구조 개선’에 있었다.

IV. 마치며

최근 E.S.G. 경영이 기후 위기에 따른 국제적 경쟁 조건, 제도적·투자적 측면 등의 변화와 맞물려 전 세계적 추세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기업의 E.S.G. 경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인식되고 있으며, 주주에 대한 분배를 전제하는 개념인 영리성과의 관계에서도 그 존재 의의가 부정되지 않고 있다. 사실 주주의 이익이라는 개념은 단기적·경제적 측면에서만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무형적 측면에서도 이해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지속가능한 형태의 E.S.G. 경영은 주주의 지지 없이는 어려운 면이 있으므로 그 출발점을 주주로 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이상으로부터 이 글에서는 기업과 주주 간의 건설적인 대화를 촉진하고, 그것을 토대로 개별 기업의 역량과 사정에 부합하는 지속가능한 형태의 E.S.G. 경영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나아가 양자의 건설적인 대화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주주총회의 의의를 강조하고, 회의체로서의 주주총회 내실화를 위한 쟁점을 살펴보았다.

참고문헌

- 권용수, “주주총회 분산 개최 및 그에 따른 실무상 과제에 관한 검토 : 4월 정기주주총회 개최를 염두에 두고”, 상사법연구, 제37권 제2호, 한국상사법학회, 2018.
- _____, 기관투자자와 기업의 대화 실무 연구, 상장회사협의회, 2020.
- _____, 전자주주총회 해외사례 및 입법 동향 연구, 상장회사협의회, 2021.
- _____, “코스닥기업과 ESG 경영의 관계 및 향후 과제 : ESG 중 ‘S’를 중심으로”, 경영법률 제33집 제2호, 한국경영법률학회, 2023.
- 김민기·김준석, 국내 개인투자자의 형태적 편의와 거래형태, 자본시장연구원, 2022.
- 김영주, 주요국의 주주제안제도와 ESG 관련 권고적 주주제안 사례 검토, 상장회사 협회의회, 2022.
- 송홍선, 스튜어드십 코드와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 자본시장연구원, 2018.
- 江頭憲治郎, “会社法改正によって日本の会社は変わらない”, 「法律時報」第86巻第11号 (日本評論社, 2014).
- 田中亘, “コーポレート・ガバナンスの観点から見た日本版スチュワードシップ・コード : 英国コードとの差違に着目して”, 「信託フォーラム」1(日本加除出版, 2014).
- 經濟産業省, 「対話先進国の実現に向けて」, 株主総会プロセスの電子化促進等に関する研究会報告書, 2016.
- 經濟産業省, 「基準日変更に関する考え方」, 第4回 株主総会プロセスの電子化促進等に関する研究会事務局提出資料(平成28年3月4日).
- OECD(2021), OECD Corporate Governance Factbook 2021.

G - BRIEF No.9

**지속가능한 형태의 E.S.G.
경영을 위한 주주총회 내실화**
- 회의체로서의 주주총회를 중심으로 -

발행일 2023년 7월 31일

발행인 한영수

발행처 한국법제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15 (반곡동, 한국법제연구원)

T. 044)861-0300 F. 044)863-9915

등록번호 1981. 8.11. 제2014-000009호

<http://www.klri.re.kr>

1. 본원의 승인없이 轉載 또는 譯載를 禁함.
2. 이 책자의 내용은 본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

E.S.G.



BRIEF